

6 이슈

후마 '기후청년의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청원 우리학교 학생 의견 내년 개정안에 담길까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 학생 여섯 명이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집담회를 가졌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배분이수 'SDGs'기후위기와 직접행동'에서 자체적으로 '기후청년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 방향을 청원하기 위해 한 학기를 보냈다. 이날 집담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 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학생들의 청원은 국회전자청원에 접수된 상태다.

후마 '기후위기와직접행동' 학생 현행 탄소중립법 개정 청원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 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우리학교 학생 6명과 국회의원(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간의 집담회가 열렸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한 탄소량과 탄소 흡수량을 동일하게 만들어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 협약 기조에 따르자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21년에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를 '탄소중립' 기조로 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이듬해 3월부터 법이 시행됐다.

이날 집담회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주제를 발표하고 난 후, 의원들이 각각의 청원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체육, 예술, 식품 등 주제 다양해 참석 의원, 모든 청원에 피드백

발표에서 이유경(체육학 2024) 씨는 자신의 전공인 체육학을 기후 문제와 접목해 탄소중립 기본법에 스포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가할 것을 청원했다. 이 씨는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스포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등 스포츠와 관련된 법안이 포

함되지 않았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한 경기 운영 방안 마련, 스포츠 노동자 보호 정책 도입, 기후 위기로 인한 스포츠 노동자의 건강 이상 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가 스포츠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연주(조소 2024) 씨 역시 자신의 전공인 미술과 기후 문제를 접목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 시 기후위기 관련 문화예술의 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법 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김 씨는 "예술을 통해 미래의 위험을 시각화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 씨의 청원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를 예술로도 극복해 보자는 발상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예술계 당사자가 아니면 내기 어려웠을 텐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발표 이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부생들이 당면해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법안 내용을 개선하며 청원안을 제안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시도"라고 말했다.

강의실에서 구상한 청원이 국회의원에게 닿기까지

김유진(스페인어학 2022) 씨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명시된 '기후대응기금' 운용상의 문제를 다뤘다. 기금 재원의 불안정성,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사업 시행,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기금 거버넌스 등을 지적했다. 이는 2023년 발간된 세계자연기금의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 씨는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 승소를 이끈 김형희 변호사도 있었다. 김 씨는 법률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국에 어떠한 기금도 규모와 운영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이를 반영한다면 개정안 청원의 타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해 이를 청원 내용에 추가했다



집담회 직후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사진=조병연 기자)



발언 중인 김유진(스페인어학 2022) 씨

(사진=조병연 기자)

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청원한 이세령(사회학 2020) 씨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리기도 했다. 이 씨는 "회기한지붕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탄소중립 역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함께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법률 사이트와 논문을 참고하기도 했다. 이 씨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보니 법률 관련 사이트를 많이 참고했다"며 "관련 논문과

'정보공개 기준 확립'에 관한 얘기는 지방의회 정보 공개 기준 조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 학생 청원 내용 개정안에 담길까

탄소 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다.

집담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청원안은 의원들의 피드백을 거쳐 보완된 뒤 입법청원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 20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수업에서 청원서를 작성한 8명의 학생 청원이 모두 접수됐다.

이세령 씨는 "국회에서 시작하고 국회에서 끝나는 법 제정과 개정"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다"며 "법을 만들고 준수하는 주체는 국민, 국민에서 시작하고 국민에서 끝나는 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